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개요	1
II.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총괄)	9
III. 청렴체감도 영역 평가 결과	10
IV. 청렴노력도 영역 평가 결과	23
V. 부패실태 평가 결과	30
VI. 심층분석	31
VII. 향후계획	33

붙임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표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개요

1.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 목적 및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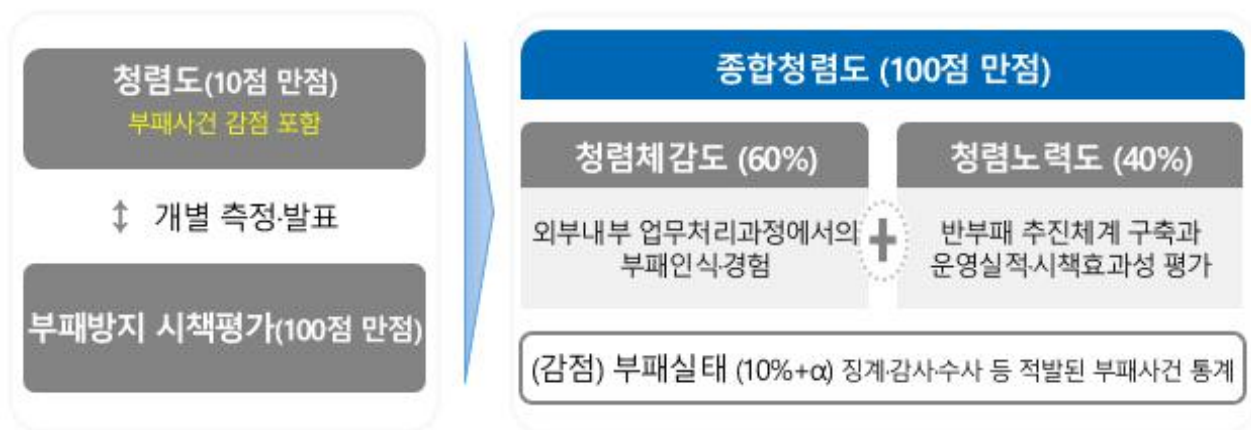
- (목적)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 평가 대상기관

- 4년제 국공립대학 33개(법인대학 6, 중앙부처 관할 국립대 26, 공립대 1)

□ 평가체계

-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최초 적용



□ '22년 평가 특징

○ 청렴체감도 항목 재구성

- (부패인식)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항목과 동일하게 구성하되, 부패 취약분야인 연구과정에서의 법령·규정 위반 관련 항목*을 추가 측정

* 연구윤리 준수 정도,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 (부패경험) 조직내부 운영과정의 청렴의무 위반 부패경험률·빈도와 함께 국공립대학 취약분야인 연구비 관련 횡령·편취 경험률·빈도 측정

○ 청렴노력도 평가대상 확대 및 특화지표 적용

- 기존 시책평가 미측정 기관(17개 대학)도 노력도 평가대상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올해는 간소화된 지표를 적용(총 8개 지표)

○ 부패실태 평가 강화

- 공통모형 부패실태 감점대상 자료 및 부패사건 기사·감사자료에 '연구 부정행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학술진흥법」 의한 제재 처분을 받은 사건을 부패실태 감점에 포함하여 반영

□ 결과 산정 및 발표

○ (발표)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발표

○ (등급) 기관별 등급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구간을 산정 →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 부여

- 1등급 : 기관 총점 \geq 유형 평균 + (상수 1.5 x 유형 표준편차)

5등급 : 기관 총점 $<$ 유형 평균 + (상수 -1.5 x 유형 표준편차)

○ (공개) 각급 기관에서는 권익위 발표 범위와 동일하게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2. 청렴체감도 평가 개요

□ 평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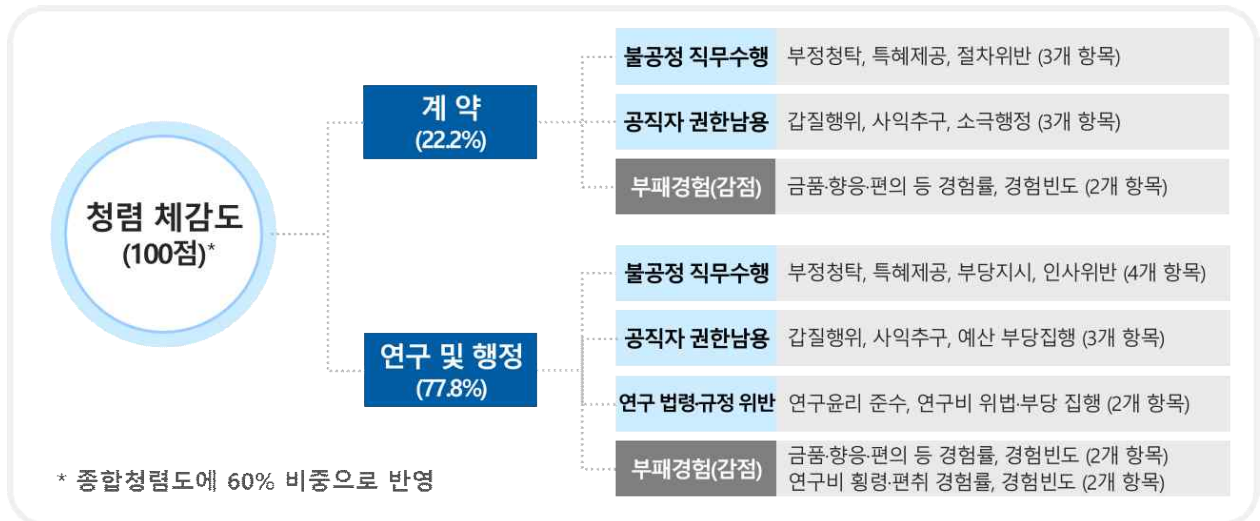
- 계약상대방 및 관련자, 조직 내부 구성원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

측정영역	설문대상
계 약(외부 업무)	계약 상대방 및 관련자
연구 및 행정(조직 내부운영) * 연구 과정, 인사·예산 등 기관 내부 업무 전반	교원, 직원, 강사,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 등

□ 평가모형

- 대학 외부업무를 측정하는 '계약'(22.2%) 영역과 조직 내부운영을 측정하는 '연구 및 행정'(77.8%) 영역을 가중합산하여 산출

< 청렴체감도 측정 체계 >



※ 영역별 가중치 및 설문 항목별 가중치는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견조사(델파이기법)를 통해 산출

○ 계약업무(외부업무) : 부패인식 6개, 부패경험 2개 항목

- 측정 대학과 계약 업무를 경험한 관련자가 업무 과정에서 부패·비위행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

※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최대 15%)으로 반영

< '22년 '계약' 측정 항목 >

구 분	계 약 (외부업무)
부패인식 (6개 항목)	<p>◆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p>◆ 공직자의 권한남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⑤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⑥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소극행정)
부패경험 (2개 항목)	<p>◆ 청렴의무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연구 및 행정(조직 내부운영) : 부패인식 9개, 부패경험 4개 항목

- 대학 소속 구성원이 내부운영 과정과 조직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
- 연구과정에서의 법령·규정 위반에 대한 인식·경험 측정

※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최대 15%)으로 반영

< '22년 '연구 및 행정' 측정 항목 >

구 분	연구 및 행정 (조직 내부운영)
부패인식 (9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업무수행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④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⑤ 직무직위·직책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⑥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⑦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 연구과정에서의 법령·규정 위반 ⑧ 연구윤리 준수 정도 ⑨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부패경험 (4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연구비 횡령·편취 ③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④ 연구비 횡령·편취 빈도

□ **평가방법**(설문조사)

○ 조사대상자 : 9,839명

측정영역	규 모	조사대상
계 약	3,641명	'21.7.1.~'22.6.30. 사이에 해당 국공립대학의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관계자
연구 및 행정	6,198명	'22.6.30. 기준 해당 국공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강사, 연구원, 조교 및 박사 과정생 등 구성원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내용) 최근 1년간('21.7.1.~'22.6.30.)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 (조사 방법) 전화 및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 (조사 기간) '22. 8월 ~ 11월
- (신뢰 수준) '계약' 95%(±0.5점), '연구 및 행정' 95%(±1.6점)

3. 청렴노력도 평가 개요

□ 평가개요

- 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을 사전 설정된 지표를 통해 평가하여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유도

□ 평가지표 : 총 8개

- 국공립대학은 필수지표를 중심으로 한 8개의 특화지표 적용
 - 추진체계(3개) - 추진실적(4개) - 시책효과성(1개)으로 구성



구분	지표 및 평가요소	배점
[1] 청렴정책 추진체계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10
	②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10
	③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5
[2] 청렴정책 추진실적	⑤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12
	⑦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10
	⑪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5
	⑬ 가점	각 1~2점 (최대 5점)
[3] 시책효과성 평가	⑭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결과	7

※ 국공립대학은 특화지표만 적용되어 총점(최대 59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청렴노력도 비중(40%)에 따라 반영

□ 평가방법

-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외부(별도 용역) 및 내부(소관 부서)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
 - 기관의 이의제기 및 검토, 권익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실적 확인 후 기관별 청렴노력도 점수 산출
- ※ 대상기간 : '21. 11. 1. ~ '22. 10. 31.
- 일부지표*는 설문조사와 통계자료(청렴체감도 결과) 활용
 - * 시책효과성 평가, 청렴컨설팅 참여 지표 등

4. 부패실태 평가

□ 평가개요

- 평가기간('21. 7. ~ '22. 11.) 중 기관의 부패행위 발생현황을 점수화하여 반영
 - ※ 자세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참고

□ 평가기준

- (대상) 국공립대학 소속 공직자의 부패사건
 - 징계(당연퇴직, 포상감경 불문경고 포함)가 이루어지거나,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혐의)가 확인된 사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술진흥법」에 따른 제재처분 중 연구 관련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건
- (유형) 반부패 법령* 관련 부패사건, 연구 부정행위 관련 사건**, 직무 관련 성 비위*** 사건 등
 -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기관별 행동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 관련 부정행위
 - *** '21년 기관장·고위직 → '22년부터 전직원 대상으로 확대

- (반영) 기관의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외부적발(국민권익위, 공수처, 검·경찰, 감사원, 상급 감독기관, 언론 등) 사건 반영

□ 평가방법

- (정량) 부패행위자의 직위, 기관 총 부패금액, 기관 정원규모, 부패 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최대 10점)
 - * 3년 이내('20년~'22년) 발생한 사건은 가중,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감경 반영
- (정성) 주요 부패사건, 외부적발 부패사건 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현장, 서면)를 통해 정성평가
 - ※ (주요 부패사건)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 등
 - (외부적발) 전체 부패사건이 일정 건수(5건) 이상, 외부 적발비율 50% 초과

5. 신뢰도 저해행위 등 제재 조치

□ 개요

- 종합청렴도 평가과정에서 호의적 답변 유도, 각종 자료 누락·조작, 지연제출 등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제재
 - ※ 자세한 제재기준·규모 및 방법은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참고

□ 제재 대상

- (적발) 대상기관 현지점검, 상시 제보 및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응답 등
- (유형) 명부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허위·조작 제출 등

□ 제재 방법

-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불이익 조치 필요성 및 제재 정도(주의·경고, 감점 등) 여부 심의·결정

II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요약

□ 종합청렴도 : 75.2점

- 33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5.2점

□ 청렴체감도 : 77.6점

- 계 약 : 95.2점

- '부패인식'은 96.8점, '부패경험' 감점은 - 1.7점
- 부패인식 중 '사익추구'(97.8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절차위반'(95.8점)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부패경험률은 0.11%로 나타남

- 연구 및 행정 : 72.6점

- '부패인식'은 78.9점, '부패경험' 감점은 - 6.3점
- 부패인식 중 '사익추구'(83.6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혜제공'(71.4점)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은 2.40%,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1.60%로 나타남

□ 청렴노력도 : 78.8점

- 총 8개 평가지표 중에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노력' 지표가 가장 높고 (100.0점),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지표가 가장 낮게(69.5점) 나타남

(단위 : 점)

청렴 노력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기관장·고위직 노력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반부패·청렴교육	부패·공익 신고자보호	시책 효과성	가점*
78.8	76.8	69.5	97.3	74.5	72.2	100.0	76.2	0.5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2.7점

- 감점 적용대상 부패사건은 총 24개 대학, 78건으로 감점대상 기관 비율(72.7%)이 전년(50.0%)에 비해 증가

※ '21년 16개 평가 대상기관 중 8개 대학에서 발생한 14개 사건 반영

III 청렴체감도 영역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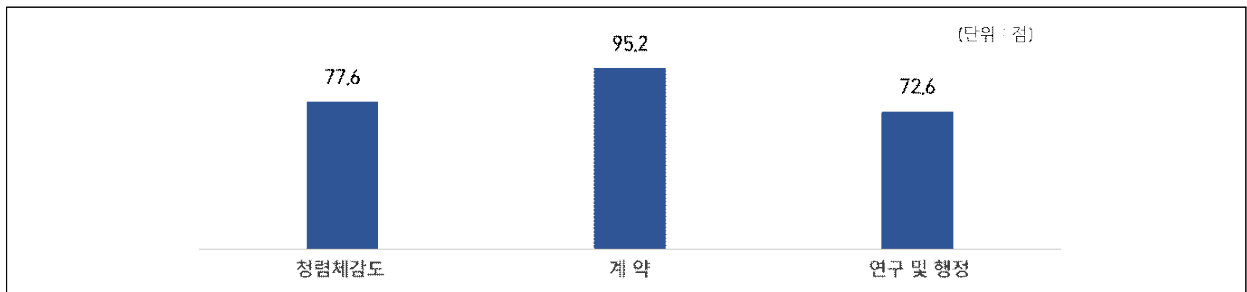
1. 청렴체감도 영역

□ 전체 33개 국공립대학의 청렴체감도는 100점 만점에 77.6점

○ '계약(외부 업무)' 영역은 95.2점(가중치 : 22.2%), '연구 및 행정(조직 내부운영)' 영역은 72.6점(가중치 : 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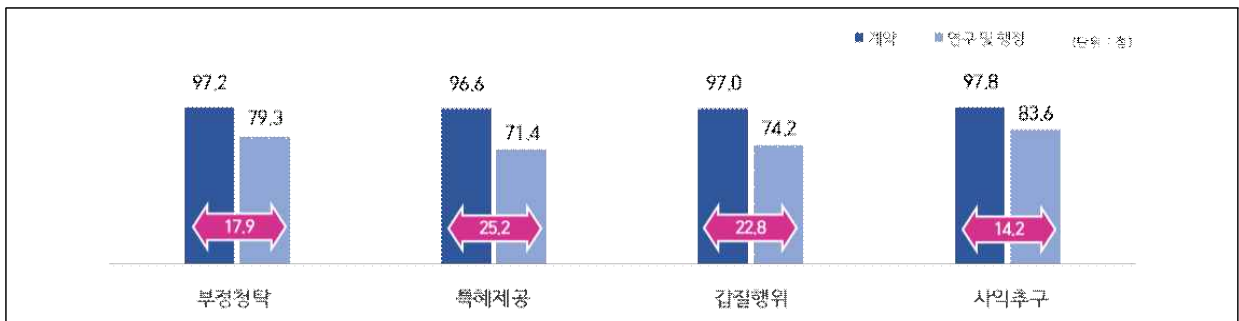
- 국공립대학 청렴체감도 영역 간 비교시 '계약' 영역(95.2점)이 '연구 및 행정' 영역(72.6점)보다 높게 나타남
- '22년도 전체 공공기관 청렴체감도 점수(82.1점)¹⁾와 비교시 4.5점 낮게 나타남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및 영역별 점수 비교 >



○ 영역별 동일 항목 간 비교시 전체적으로 '연구 및 행정' 영역 항목이 낮게 나타났고, '특혜 제공' 항목 간 차이가 가장 크게(25.2%) 나타남

< '계약', '연구 및 행정' 동일 항목 부패인식 비교 >



1)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5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로, 국공립대학과 측정 모형·항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 시 주의 필요

2. 계약 영역 체감도 평가결과

- 지난 1년간 각 대학과 구매·용역·공사 계약 업무를 경험한 업무 관계자가 계약과정에서 인식·경험한 부패 수준(총 8개 항목)을 평가

< 계약영역 세부 측정항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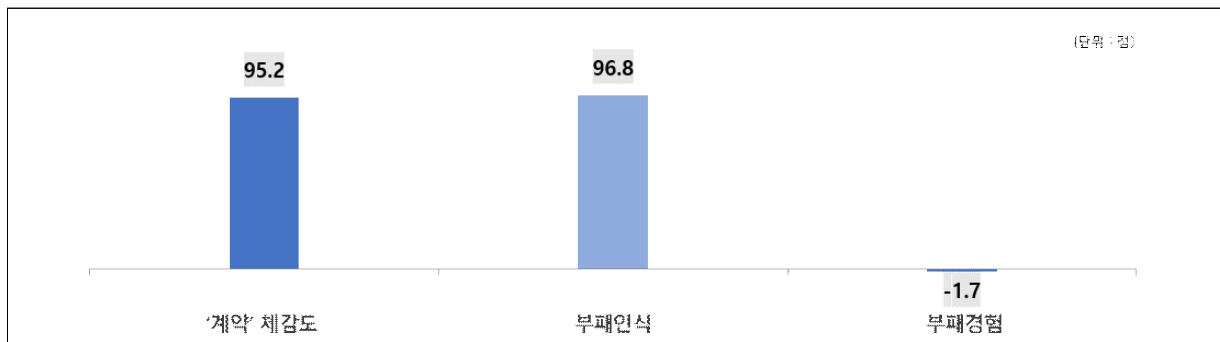
측정부문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계약 영역 체감도 점수			95.2
부패인식	계약 영역 부패인식 점수		96.8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211)	97.2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0.199)	96.6
		기준 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0.135)	95.8
	공직자의 권한남용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0.161)	97.0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0.183)	97.8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0.111)	96.0
부패경험	(최대 15점 감점으로 변환)		-1.7
	청렴의무 위반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0.552)	87.9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0.448)	89.7

- 계약 영역의 체감도는 100점 만점에 95.2점²⁾

- 부패인식 점수는 96.8점, 부패경험 감점* 점수는 - 1.7점

* 최대 15점 감점으로 변환되어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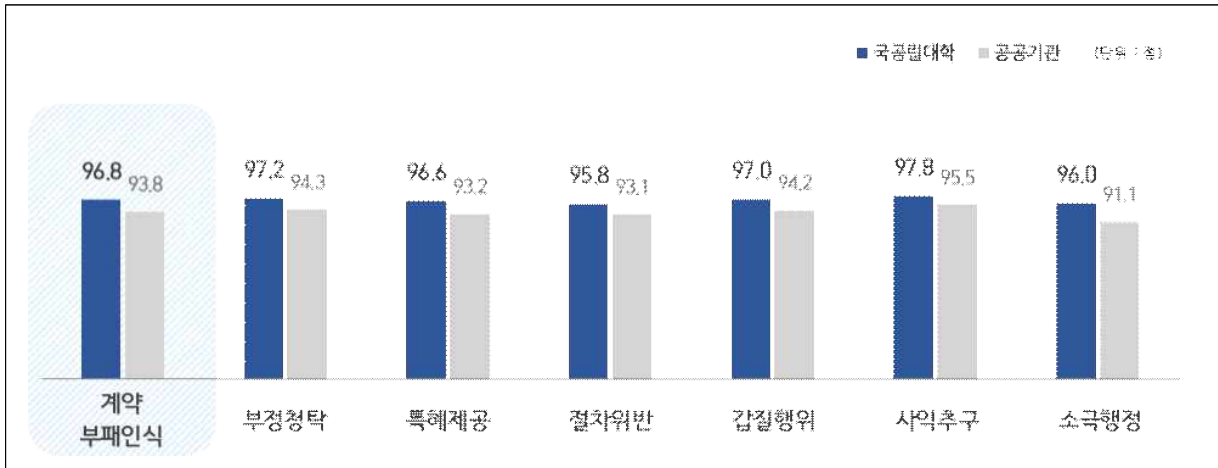
< 계약 영역 체감도 >



2) 각각의 점수는 기관 평균점수를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측정모형 산식에 대입 시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부패인식) 부패인식 점수는 96.8점³⁾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점수가 가장 높게(97.8점) 나타났고,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의 점수가 가장 낮게(95.8점) 나타남

< 계약 영역 '부패인식' 항목별 비교 >



- (부패경험) 부패경험 감점 점수는 - 1.7점으로 부패경험률은 0.11%, 응답자 평균 경험빈도는 0.004회로 나타남
 - 유형별로는 금품(0.05%), 편의(0.05%), 채용 등 사적이익(0.03%)으로 각각 경험이 나타났고, 향응 및 거래특혜·정보에서는 경험이 나타나지 않음

< 계약 영역 금품·향응·편의 등 세부 부패경험률 >

(단위 : %)

구 분	금품	향응	편의	채용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정보
국공립대학	0.05	-	0.05	0.03	-
전체 공공기관 ⁴⁾	0.13	0.10	0.11	0.05	0.04

3) 각각의 점수는 기관 평균점수를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측정모형 산식에 대입 시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5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로, 국공립대학과 측정 모형·항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 시 주의 필요

2. 연구 및 행정 영역 체감도 평가결과

① 전반적 평가 결과

- 대학 내부 구성원들이 기관 내부 운영 과정, 연구수행 과정 등에서 인식·경험한 부패 정도(총 13개 항목)를 평가

< 연구 및 행정 영역 세부 측정항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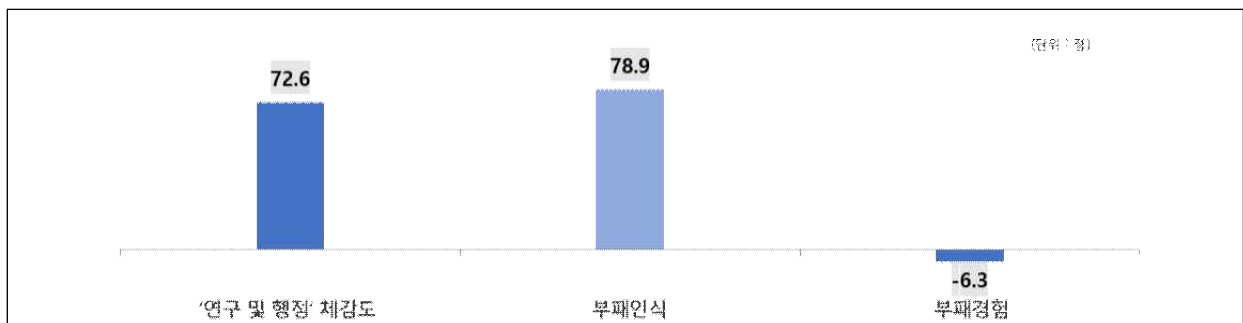
측정부문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연구 및 행정 영역 체감도 점수			72.6
연구 및 행정 영역 부패인식 점수			78.9
부패인식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107)	79.3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0.112)	71.4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0.108)	77.8
		기준·절차를 위반한 인사업무 처리(0.093)	78.7
	공직자의 권한남용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0.110)	74.2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0.124)	83.6
		(연구비 외)예산의 위법부당 집행(0.111)	81.0
연구 관련 법령규정 위반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0.140)	82.1	
	연구윤리 준수 여부(0.095)	80.5	
(최대 15점 감점으로 변환)			-6.3
부패경험	청렴의무 위반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0.264)	47.5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0.235)	52.3
	연구비 횡령·편취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0.266)	63.9
		연구비 횡령·편취 빈도(0.235)	69.4

- 연구 및 행정 영역의 체감도는 100점 만점에 **72.6점**

- 부패인식 점수는 **78.9점**, 부패경험 감점* 점수는 **- 6.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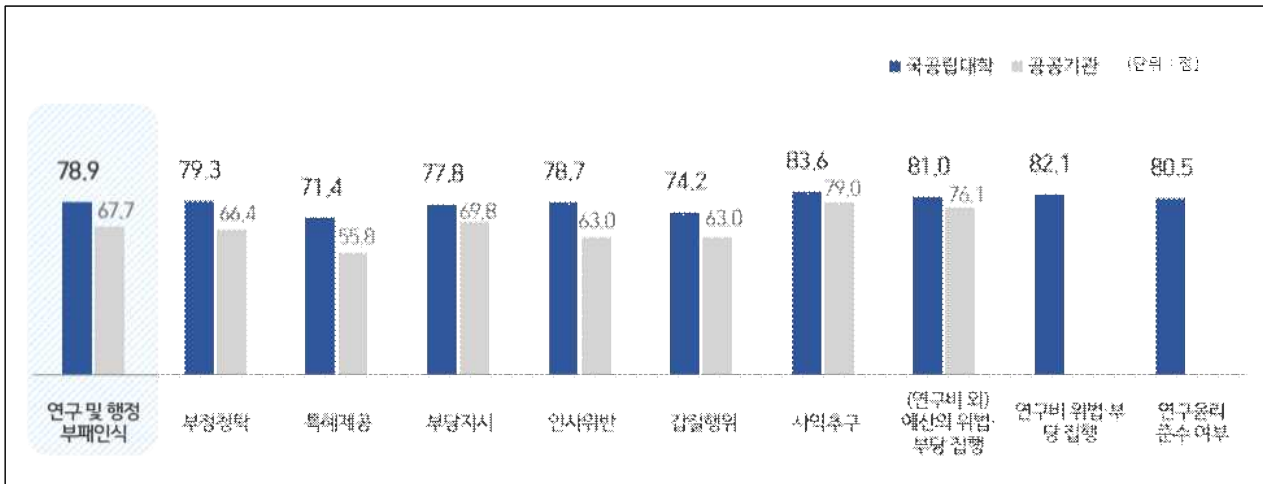
* 최대 15점 감점으로 변환되어 반영

< 연구 및 행정 영역 체감도 >



- (부패인식) 부패인식 점수는 78.9점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점수가 가장 높게(83.6점) 나타났고,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점수가 가장 낮게(71.4점)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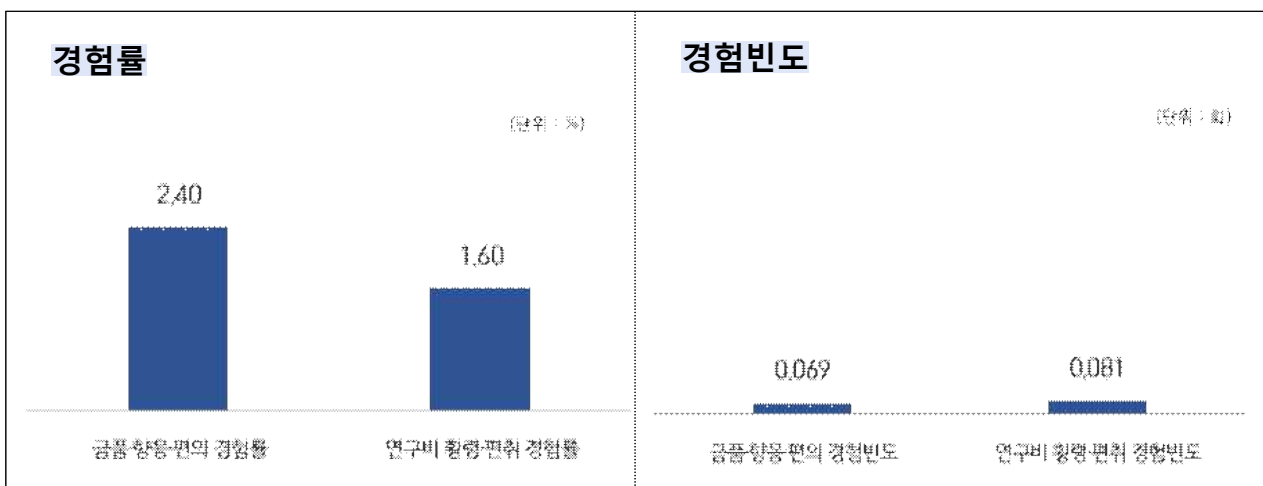
< 연구 및 행정 영역 부패인식 항목별 비교 >



- (부패경험) 부패경험 감점 점수는 - 6.3점

- 금품·향응·편의 등 경험률은 2.40%, 응답자 평균 경험빈도는 0.069회
-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1.60%, 응답자 평균 경험빈도는 0.08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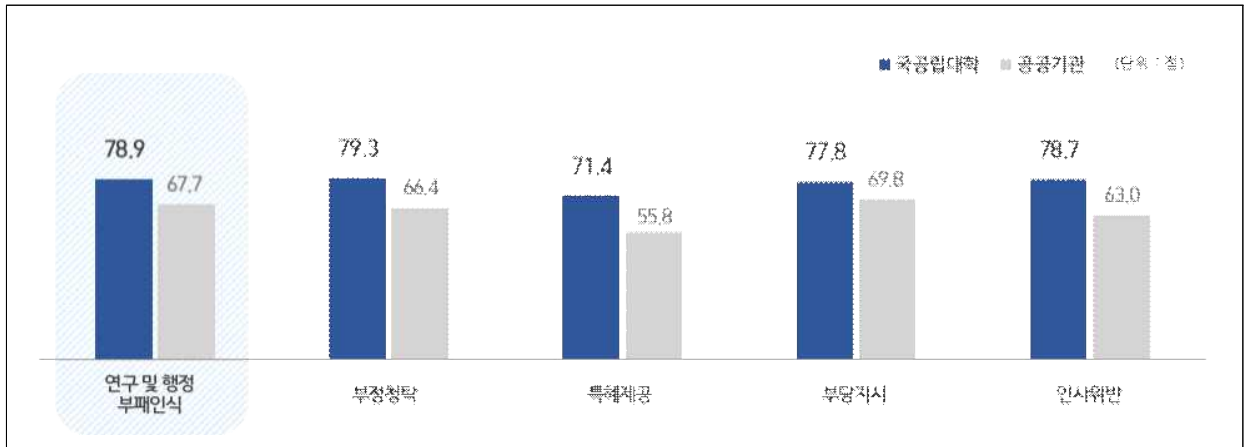
< 연구 및 행정 영역 부패경험 항목별 비교 >



②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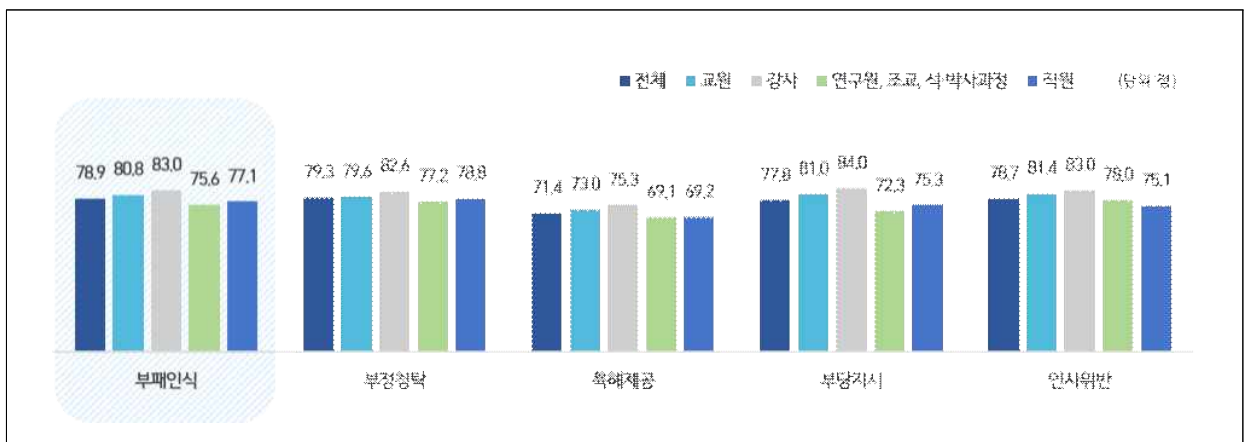
- 항목 중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점수가 가장 높게(79.3점) 나타났고,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제공' 점수가 가장 낮게(71.4점) 나타남

< 불공정한 직무수행 항목별 비교 >



- 직군별로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강사'의 점수가 높게(83.0점) 나타났고, '연구원, 조교, 석·박사과정'의 점수가 낮게(75.6점) 나타남
- 모든 직군에서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 항목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특히 '연구원, 조교, 석·박사과정'의 점수가 가장 낮게(69.1점)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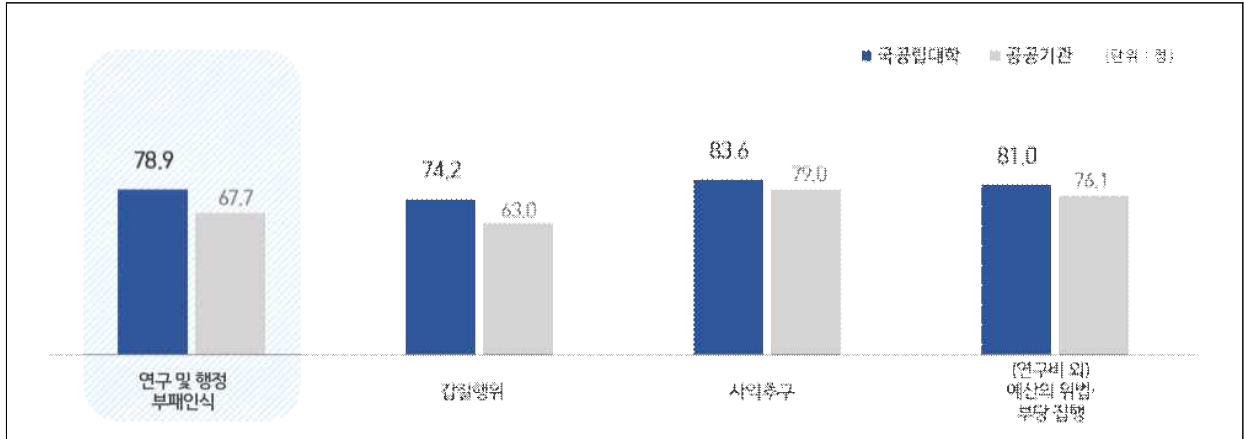
< 불공정한 직무수행 직군별 비교 >



③ 공직자의 권한남용 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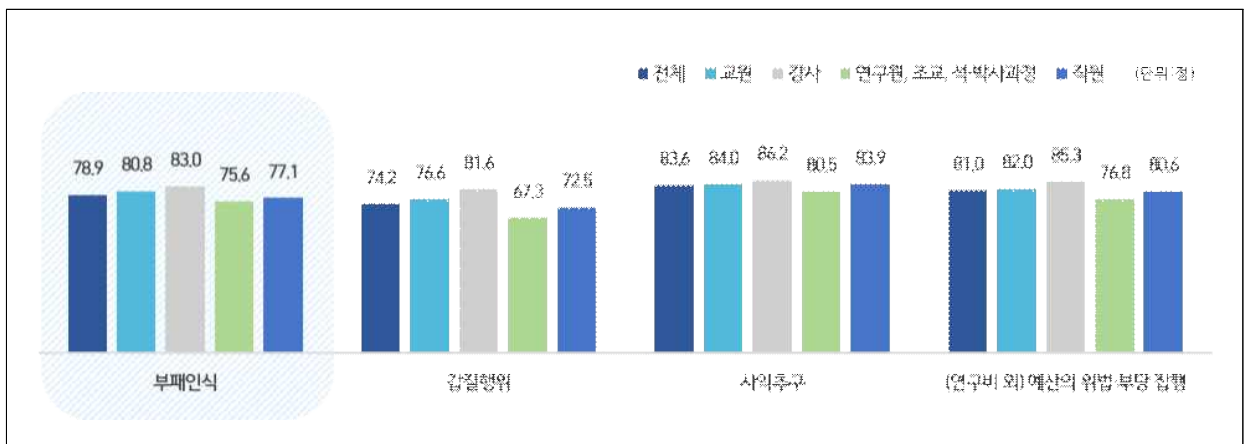
- 항목 중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사익추구'의 점수가 가장 높게(83.6점) 나타났고,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의 점수가 가장 낮게(74.2점) 나타남

< 공직자의 권한남용 항목별 비교 >



- 전 직군 공통적으로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사익추구'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모든 항목에서 '연구원, 조교, 석·박사과정'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특히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점수가 낮게(67.3점)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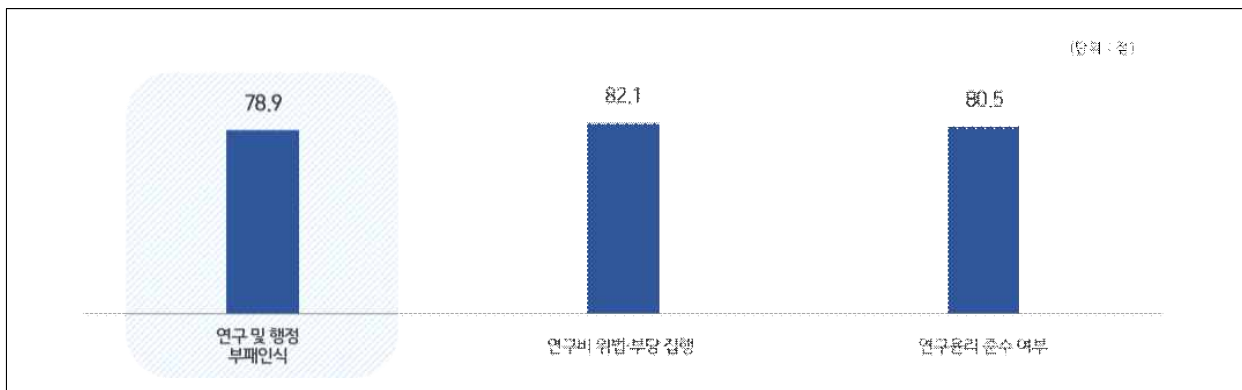
< 공직자의 권한남용 직군별 비교 >



④ 연구 관련 법령·규정 위반 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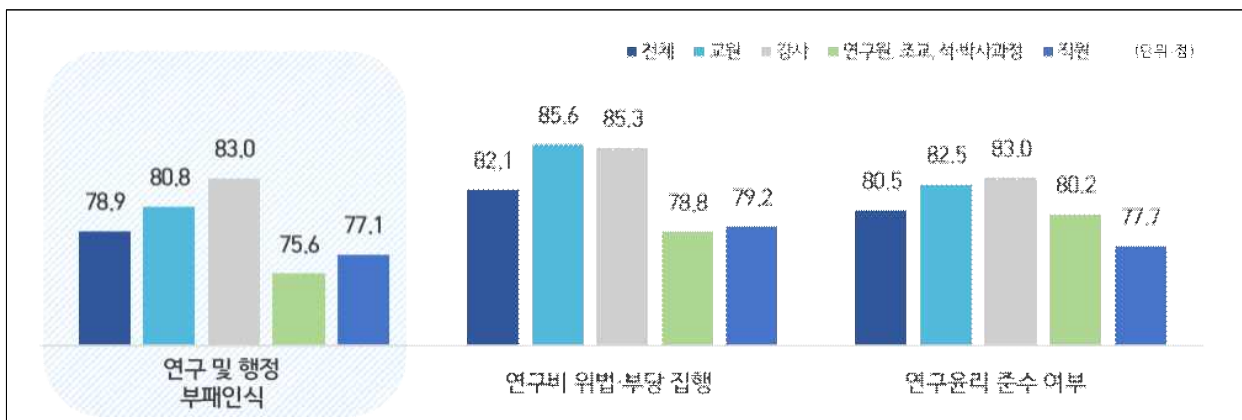
-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82.1점)의 점수가 '연구윤리 준수 여부'(80.5점)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두 항목 모두 '연구 및 행정' 전체 점수(78.9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구 관련 법령·규정 위반 항목별 비교 >



- 직군별로는 두 항목 모두 교원, 강사의 점수가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남
 -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은 '교원'의 점수가 가장 높게(85.6점) 나타났고, '연구원, 조교, 석·박사'의 점수가 가장 낮게(78.8점) 나타남
 -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대해 '강사'의 점수가 가장 높게(83.0점) 나타났고, '직원'의 점수가 가장 낮게(77.7점)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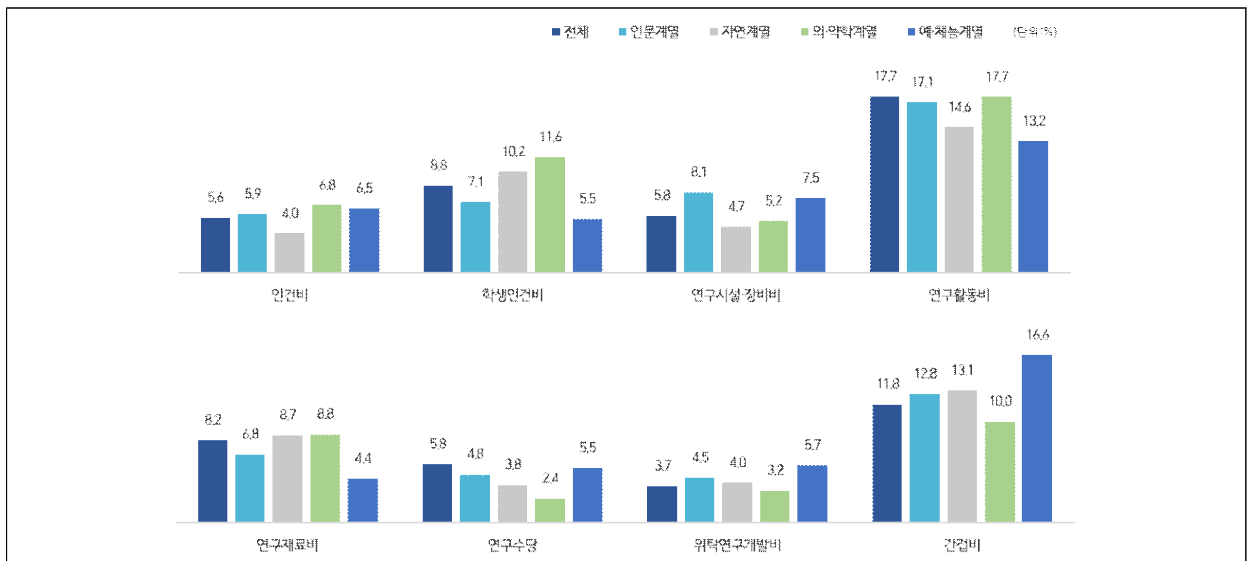
< 연구 관련 법령·규정 위반 직군별 비교 >



(④)-1)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항목 추가 분석

-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빈발 비목’에 대해 ‘연구활동비(17.7%)’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간접비(11.8%)’, ‘학생인건비(8.8%)’ 등 순으로 나타남
- 학과별로는 ‘인문, 자연, 의·약학계열’은 ‘연구활동비*’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 ‘예·체능계열’은 ‘간접비(16.6%)’를 가장 많이 응답함
- * 의·약학계열(17.7%), 인문계열(17.1%), 자연계열(14.6%), 예체능계열(13.2%) 순

<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빈발 비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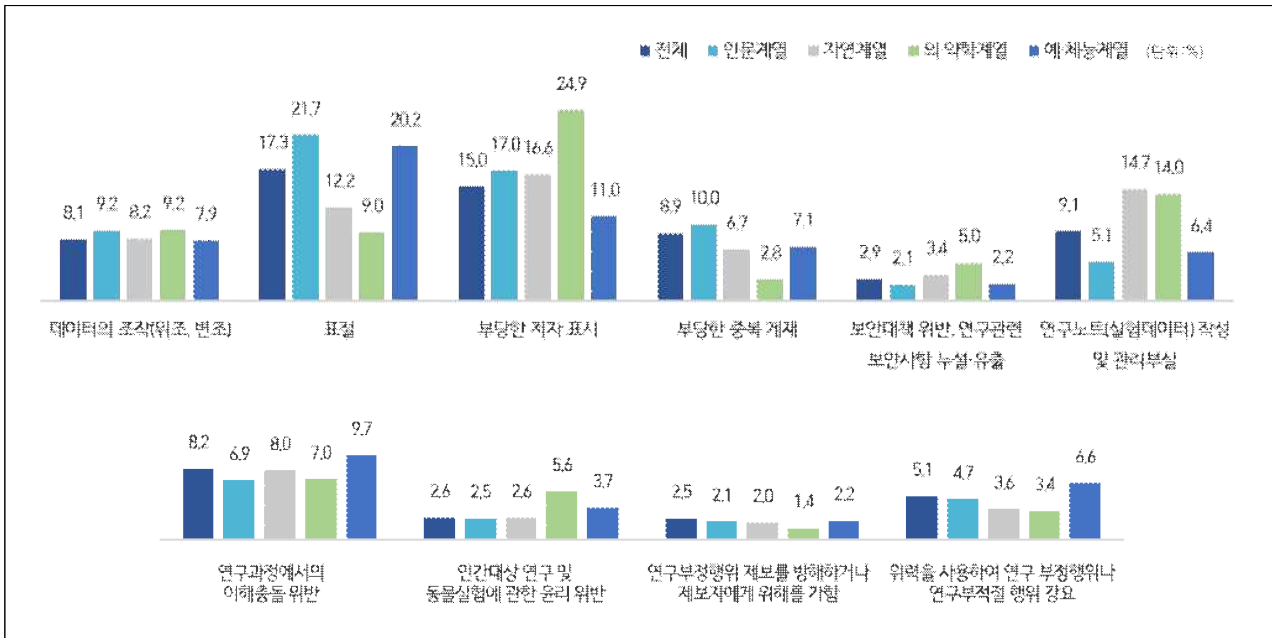


※ 인문계열(인문, 사회, 법정, 경상, 사범 등 포함), 자연계열(자연, 이공 등 포함)

(④)-2) 연구윤리 준수 여부 항목 추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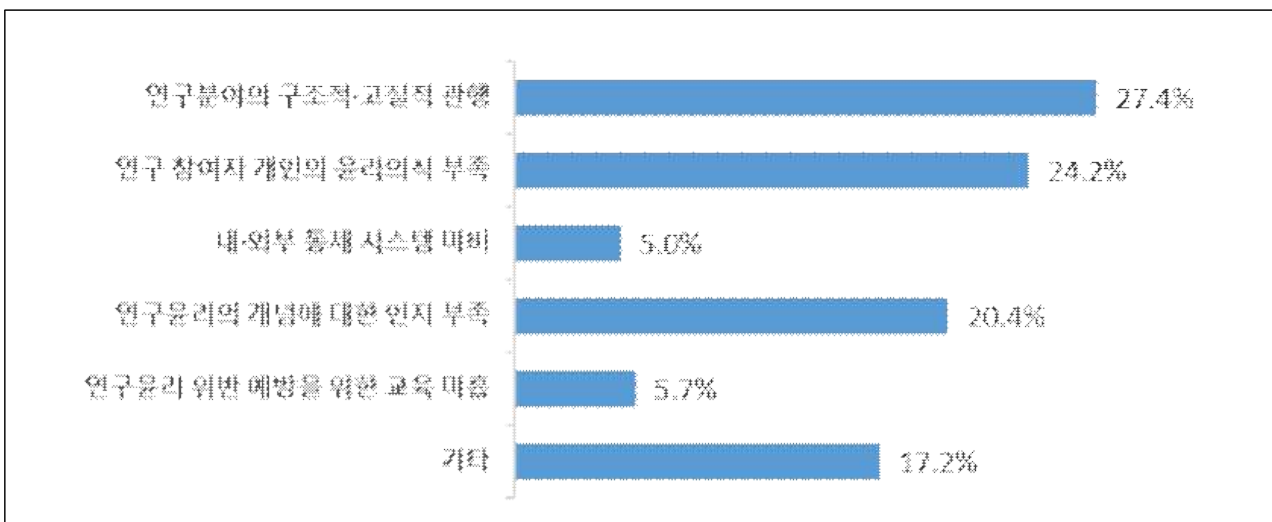
- ‘연구윤리 위반행위 빈발 분야’에 대해 ‘표절(17.3%)’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15.0%)’, ‘연구노트(실험데이터) 작성 및 관리부실(9.1%)’, ‘부당한 중복 게재(8.9%)’ 등 순으로 나타남
- 학과별로는 ‘인문, 예·체능 계열’은 ‘표절*’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자연, 의·약학 계열’은 ‘부당한 저자표시**’를 가장 많이 응답함
- * 표절 : 인문계열(21.7%), 예체능계열(20.2%), 자연계열(12.2%), 의약학계열(9.0%) 순
- ** 부당 저자표시 : 의약학계열(24.9%), 인문계열(17.0%), 자연계열(16.6%), 예체능계열(11.0%) 순

< 연구윤리 위반 빈발 분야 >



- '연구윤리 위반의 주요 원인'에 대해, '연구분야의 구조적·고질적 관행(27.4%)'을 가장 많이 응답
-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24.2%)', '연구윤리 개념에 대한 인지 부족(20.4%)', 연구윤리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 미흡(5.7%), 내·외부 통제시스템 미비(5.0%) 순으로 나타남

< 연구윤리 위반 주요 원인 >



⑤ 청렴의무 위반 부문 분석

□ 금품·향응·편의 등 경험률은 2.40%, 응답자 평균 경험빈도는 0.069회

- 유형별로는 금품(0.97%), 편의(0.97%), 향응(0.82%), 채용 등 사적이익(0.27%), 거래특혜·정보(0.15%) 순으로 나타남

< 연구 및 행정 영역 금품·향응·편의 등 세부 경험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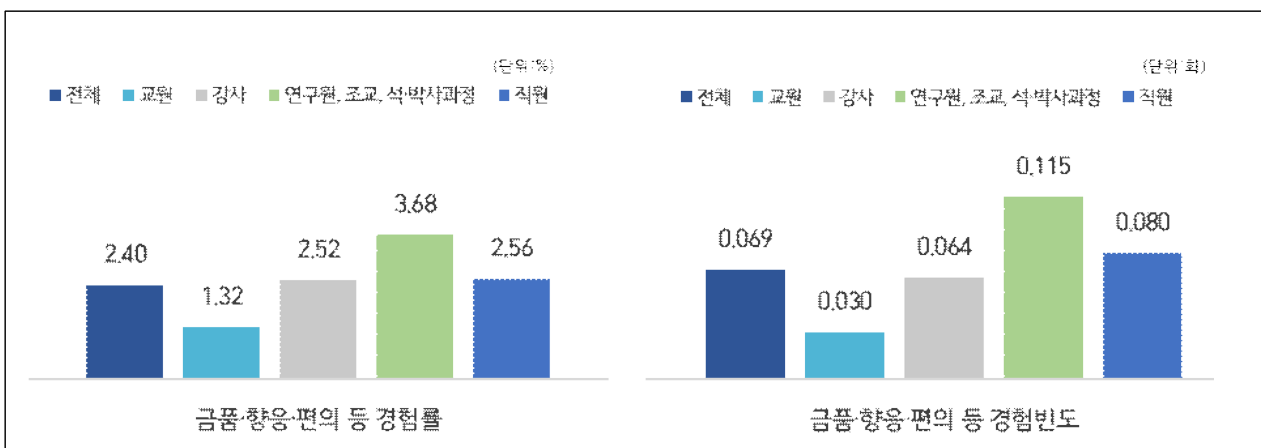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금품	향응	편의	채용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정보
국공립대학	0.97	0.82	0.97	0.27	0.15
전체 공공기관	0.62	0.82	1.18	0.38	0.14

□ 직군별로 금품·향응·편의 등 경험률·경험빈도를 분석한 결과 직군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경험률은 '연구원, 조교, 석·박사과정'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원'이 1.3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험빈도는 '연구원, 조교, 석박사과정'이 0.115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원'이 0.030회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연구 및 행정 영역 직군별 금품·향응·편의 등 경험률/경험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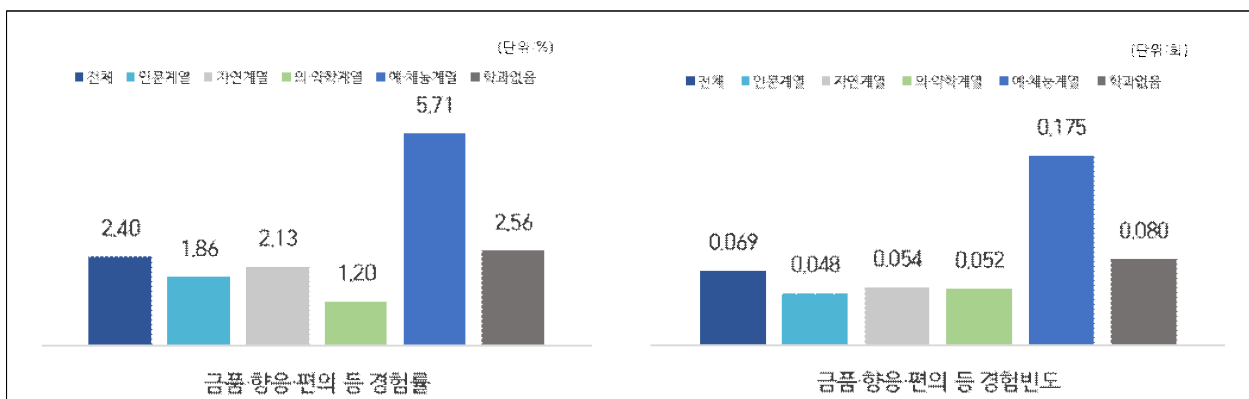


※ 경험빈도는 응답자 1인 평균값(경험자가 응답한 빈도의 총합/전체 응답자 수)

□ 학과별로 금품·향응·편의 등 경험률·경험빈도를 분석한 결과 '예체능계열'에서 경험이 많이 나타남

- 경험률은 '의·약학계열'이 가장 낮게(1.20%) 나타났고, '예·체능계열'의 경험률이 전체 평균(2.40%) 보다 큰 폭으로 높게(5.71%, +3.31%p) 나타남
- 경험빈도는 '인문계열'이 가장 낮게(0.048회) 나타났고, '예·체능계열'이 전체평균(0.069회)보다 큰 폭으로 높게(0.175회, +0.106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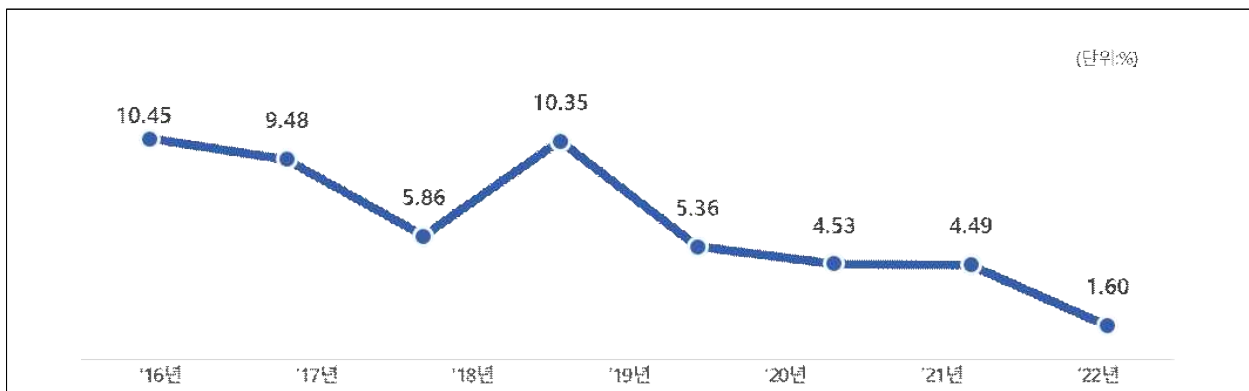
< 연구 및 행정 영역 학과별 금품·향응·편의 등 경험률/경험빈도 >



⑥ 연구비 횡령·편취 부문 분석

-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1.60%, 응답자 평균 경험빈도는 0.081회
-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전년(4.49%) 대비 대폭 감소(-2.89%p)

< 연구비 횡령 경험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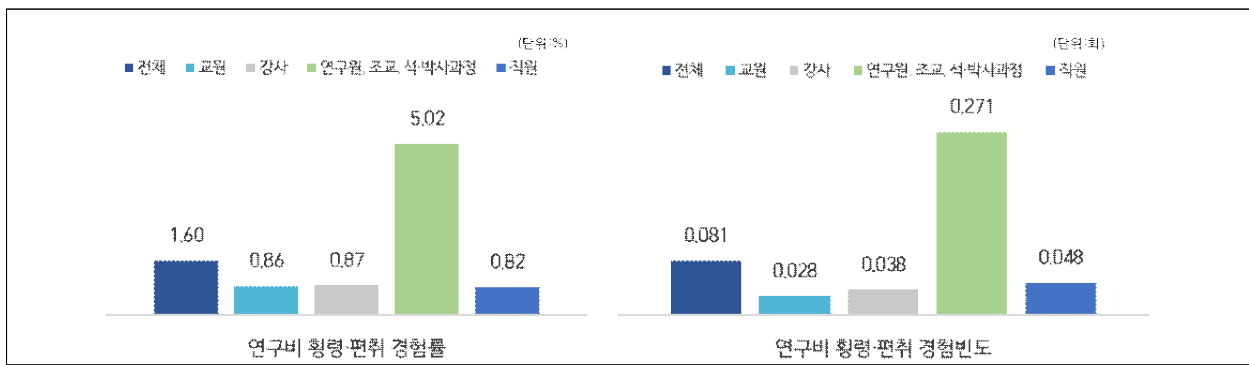


※ 부패경험률이 낮을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직군별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경험빈도는 ‘연구원, 조교, 석·박사과정’에서 높게 나타남

- 경험률은 ‘직원’이 가장 낮게(0.82%) 나타났고, ‘연구원, 조교, 석·박사과정’에서 전체평균(1.60%)보다 큰 폭으로 높게(5.02%, +3.42%p) 나타남
- 경험빈도는 ‘교원’이 가장 낮게(0.028회) 나타났고, ‘연구원, 조교, 석·박사과정’에서 전체 평균(0.081회) 보다 큰 폭으로 높게(0.271회, +0.190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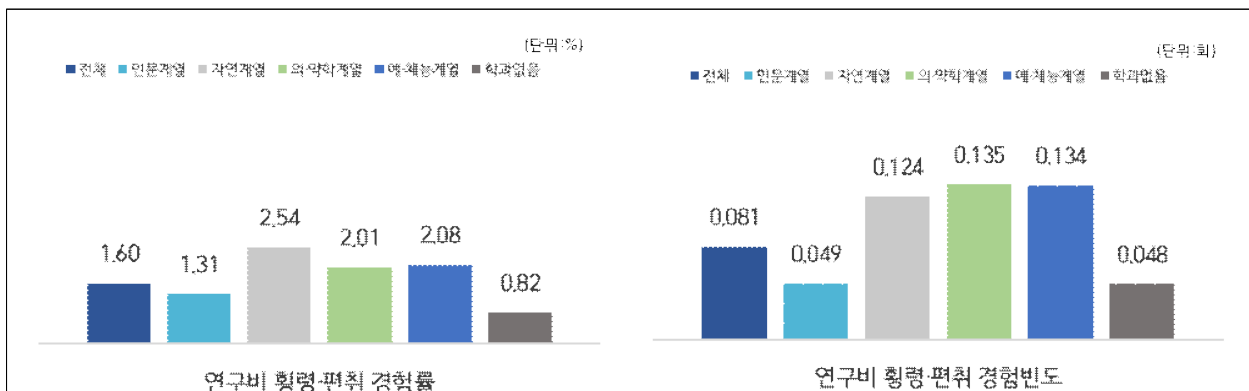
< 연구 및 행정 영역 직군별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경험빈도 >



□ 학과별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경험빈도는 ‘인문계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나머지 계열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경험률은 ‘인문계열’에서 가장 낮게(1.31%) 나타났고, ‘자연계열’에서 가장 높게(2.54%) 나타남
- 경험빈도는 ‘인문계열’에서 가장 낮게(0.049회) 나타났고, ‘의·약학계열’에서 가장 높게(0.135회) 나타남

< 연구 및 행정 영역 학과별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경험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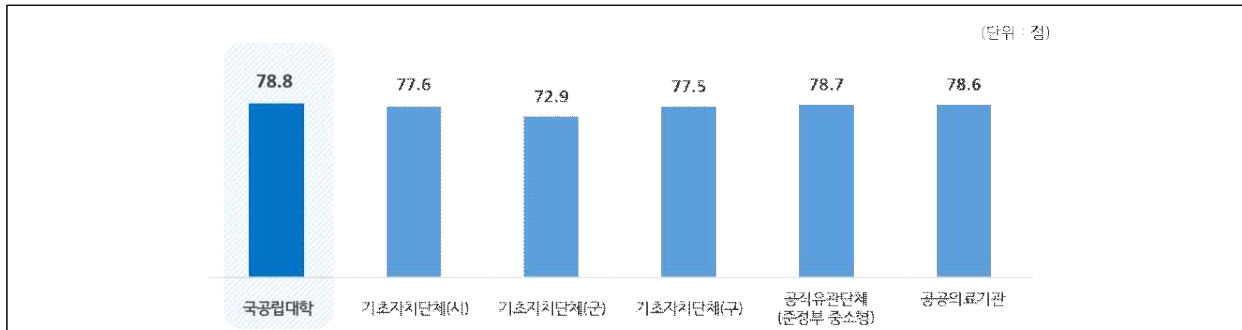


VI 청렴노력도 영역 평가 결과

1. 청렴노력도 영역 전반

- 국공립대학의 청렴노력도는 100점 만점에 78.8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82.2점)에 비해 낮은 수준
- 특화지표(8개)를 적용받는 타 기관 유형(기초자치단체, 준정부중소형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높은 수준

< 청렴노력도 특화지표 적용기관 점수 비교 >



- 지표별로 비교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노력’ 지표가 가장 높고(100.0점),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지표가 가장 낮게(69.5점) 나타남
- 공공기관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지표가 큰 차이로 낮게(72.2점, -19.8점) 나타났으며, ‘시책효과성 평가’ 지표가 높게 나타남(76.2점, +6.7점)

< 국공립대학 청렴노력도 지표별 점수 >

구 분		국공립대학	전체 공공기관	Gap
청렴노력도		78.8	82.2	-3.4
청렴정책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76.8	70.4	+6.4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69.5	70.7	-1.2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97.3	98.2	-0.9
청렴정책 추진실적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74.5	71.1	+3.4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72.2	92.0	-19.8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100.0	98.8	+1.2
	가점	0.5	0.5	-
시책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직원 평가	76.2	69.5	+6.7

2. 지표별 평가 결과

(1) 청렴정책 추진체계

□ [1번지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평가지표) 기관의 반부패 추진계획 평가를 통해 기관의 업무특성·청렴도 결과 분석 등을 통한 자율적 추진계획 수립 및 충실한 이행 유도

※ 세부 평가기준 : ① 기관 특성 반영 등 분석의 적절성 ② 반부패 시책 추진의 다양성·도전성 ③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의 적정성·실현 가능성 등

- (평가결과)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의 평균 점수는 76.8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점수(70.4점)에 비해 높은 수준

- 기관별 평균 17건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연간 일정에 맞춰 이행 추진

※ 기관의 과제별 이행 현황은 별도 지표(5번)로 평가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지표 실적 및 점수 >

구 분	세부 추진과제 수		지표점수(점)
	전체(건)	기관당 평균(건)	
국공립대학	561	17.0	76.8
전체 공공기관	10,024	20.0	70.4

※ 전체기관 과제 수는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실적 미포함

- (주요성과) 국공립대학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입체적 분석* 및 대책 마련·추진으로, 기관의 청렴성 향상 노력 강화

* 기관별 '21년도 청렴도·시책평가 결과, SWOT,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국민·자문단 등 의견수렴 결과 등

- (보완사항)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 개선 노력을 통해 기관 청렴도가 개선되도록 근본적 원인 분석에 대한 지속적 관심 유도

- 일부 기관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청렴 노력도 지표별 이행방안과 일정만 나열하고 있어 효과에 한계

□ [2번지표]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 (평가지표)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과정에서 기관장 및 고위직 간부의 참여·추진 체계와 실적, 청렴 의지와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 평가
- (평가결과)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평균점수는 69.5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점수(70.7점)에 비해 낮은 수준
- (주요성과) 기관장·고위직의 청렴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등으로 반부패 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청렴업무의 실효성을 제고
- (보완사항) 기관장·고위직 간부가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주요 반부패 시책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다수의 기관에서 기관장·고위직의 활동이 각종 청렴교육 및 청렴 서약식 등 일회성 단편적인 사례에 집중되고 있어 개선 필요
 - 기관장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내부 청렴협의체 또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청렴업무 유공자나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권장

□ [3번지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 (평가지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관특성에 적합한 지침을 제정하고 운영하는지 여부, 신고 접수·처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였는지 여부 평가
- (평가결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평균 점수는 97.3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점수(98.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주요성과) 대부분(96.7%)의 국공립대학이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지표 실적 및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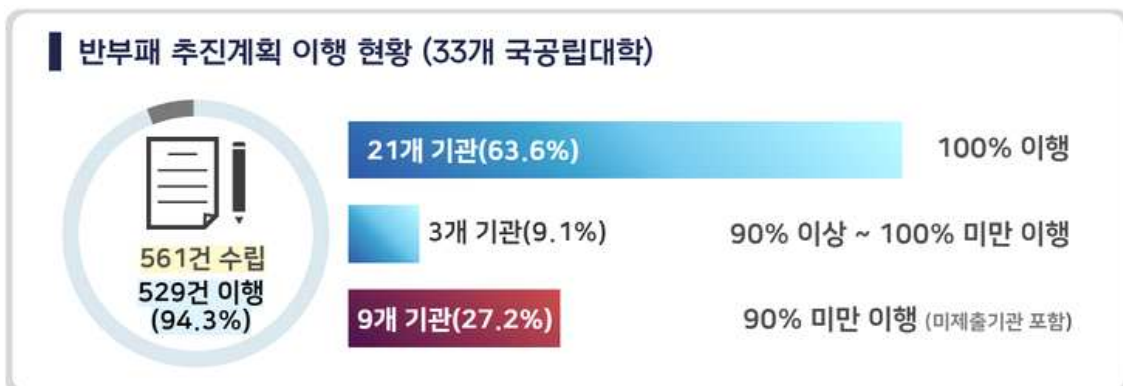
구 분	기관수	담당관 지정 현황(개)			운영지침 제정 현황(개)			지표점수 (점)
		법시행전 지정	법시행후 지정	미지정	6.30 이전제정	7.1 이후제정	미제정	
국공립대학	33	31	1	1	31	1	1	97.3
전체 공공기관	501	449	52	0	493	7	1	98.2

- (보완사항) 담당관 지정은 완료하였으나, 기관 규모나 소속기관의 특성 및 개수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제도적 개선 필요

[2] 청렴정책 추진실적

□ [5번지표]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및 성과

- (평가지표) 기관에서 수립한 반부패 추진계획의 이행 여부, 효과성 평가
 - 기관별 특성과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하는 등 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
- (평가결과) 반부패 추진계획 평균점수는 74.5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 점수(71.1점)에 비해 높은 수준
- (주요성과) 각급 기관별로 평균 16.0건의 계획을 수립·이행하였고, 72.7%의 기관이 당초 계획과제의 90% 이상을 차질 없이 이행
 - 총 32개 기관에서 총 561건의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중 529건(94.3%)의 시책 이행 완료



- (보완사항) 일부 기관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구체적 분석없이 단편적인 청렴교육 및 제도개선 사례 등을 성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 필요

□ [7번지표]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평가지표) 고위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관별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 여부,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실시 여부 평가
- (평가결과)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의 평균점수는 72.2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점수(92.0점)에 비해 낮은 수준
- 주요성과

- (고위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평가 대상기관 고위공직자 총 768명 중 583명(75.9%)이 부패방지교육을 이수

< 고위직 부패방지교육 이수 현황 >

구 분	전체 이수율			기관별 이수율					
	현원 (명)	이수인원 (명)	이수율 (%)	전체	100%	80% 이상	50% 이상	50% 미만	0%
국공립대학	768	583	75.9	33	17	4	4	1	7
전체 공공기관	5,570	5,132	92.1	501	418	25	17	12	29

- (전직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수율) 평가대상 기관 현원 총 3.9만명 중 2.6만명(66.1%)이 교육 이수

< 전직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수 현황 >

구 분	전체 이수율			기관별 이수율					
	현원 (만명)	이수인원 (만명)	이수율 (%)	전체	100%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0%
국공립대학	3.9	2.6	66.1	31	0	0	14	17	0
전체 공공기관	94.4	85.7	90.7	495	29	268	157	38	3

※ 교육 이수 실적을 미제출한 2개 기관을 제외하고, 31개 기관에 대해 분석

- (기관별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 여부) 전체기관의 72.7%(24개)는 청렴교육 이수현황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공직자에게 공개
- (보완사항) 청렴교육 실적이 전체 공공기관 대비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11번지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 (평가지표)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 및 적극적 사후관리 유도를 위해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및 보호결정 이행 여부, 협조도 등을 평가
- (평가결과)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평균점수는 **100.0점**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사례, 신고자 보호결정 미이행 사례 모두 미발생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지표 실적 현황 >

구 분	전체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신고자 보호관련 협조
		미발생	발생	해당 없음	전부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국공립대학	33	33	0	33	0	0	33
전체 공공기관	501	493	8	489	6	6	501

□ **[13번지표] 가 점**

- (평가지표) ① 멘토기관 청렴컨설팅 추진노력, ② 부패사건 자체적발 노력, ③ 적극행정 구현 노력, ④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
- (평가결과) 국공립대학 가점 평균은 **0.5점**으로 '신고창구 연결 강화'에서만 가점 발생
 - (신고창구 연결 강화) 33개 기관 중 17개 기관(51.5%)이 부패공익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청렴포털과 연계

[3] 시책효과성 평가

□ [14번지표] 시책 효과성 평가

○ (평가지표) 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시책*에 대한 구성원의 효과성을 평가

* ①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② 기관장·고위직 의지·노력, ③ 청렴교육 이행, ④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 타 노력도 지표와 달리 청렴체감도 설문에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설문조사 실시 후 청렴노력도 점수에 반영

※ 리커트 7점 척도 활용

○ 평가결과

- '반부패 시책 효과성 평가'의 평균점수는 76.2점

- 각 평가 항목별로는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에 대한 체감 인식이 78.2점으로 가장 높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노력'이 72.5점으로 가장 낮음

< '시책 효과성 평가' 항목별 인식 점수 >

구 분	시책 효과성(점)	반부패 계획	기관장 노력	청렴교육 이행	이해충돌 정착노력	신고자 보호노력
국공립대학	76.2점	78.2	77.3	77.1	75.9	<u>72.5</u>
전체기관	69.5점	72.0	70.2	70.8	69.9	64.6

V 부패실태 평가 결과

□ 부패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교직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 정원 및 발생 시점 등을 고려한 산식에 의해 도출

○ 33개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감점 평균은 -2.7점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3.3건, 평균 감점은 -3.8점

※ '21년 감점 적용 기관 평균 사건 수는 1.8건, 평균 감점은 -4.9점⁵⁾

< 부패사건 감점 현황 >

구분	감점기관			사건수		발생금액			감점	
	평가 대상 기관	감점 대상 기관	발생률	전체 건수	감점 기관 평균	전체 금액*	감점기관 평균금액	사건당 평균금액	전체 기관 평균	감점 기관 평균
2022	33개	24개	72.7%	78건	3.3건	10억 7,594만원	4,483만원	1,379만원	-2.7점	-3.8점
2021	16개	8개	50.0%	14건	1.8건	15억 4,417만원	1억 9,302만원	1억 1,030만원	-2.4점	-4.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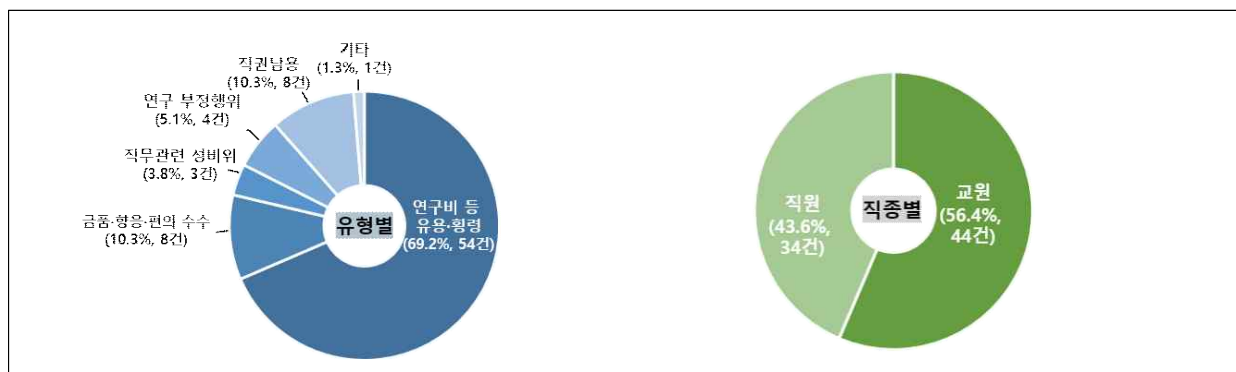
* 금액 :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금액이 확인 가능한 사건 60건 기준

□ 부패사건을 유형별,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 유형별로는 '연구비 등 유용·횡령'(69.2%)이 가장 많고, 직종별로는 '교원'(56.4%)* 직종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함

*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부패유형별, 직종별 부패발생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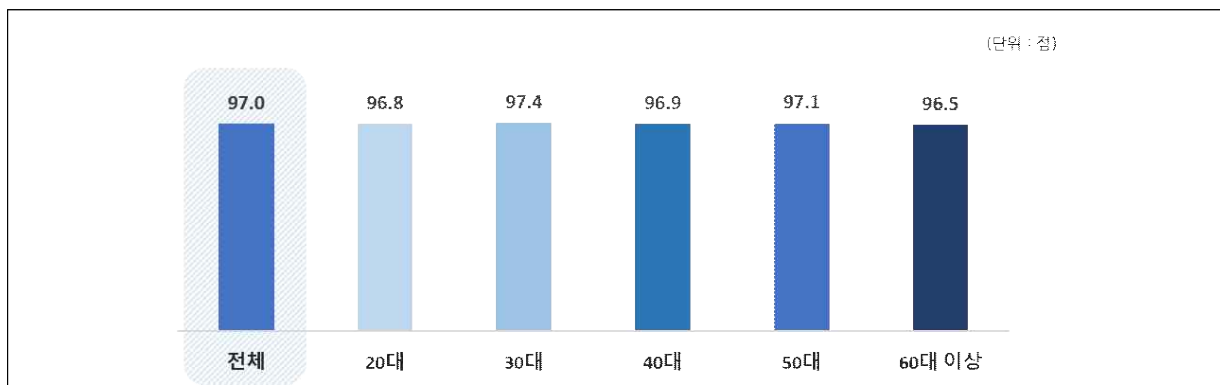
5) '21년 감점 적용기관의 평균감점 점수 -0.22점을 '22년과 동일한 기준(최대 10점 감점)으로 환산한 점수

VI 심층분석

1. 외부·내부 갑질 관련 항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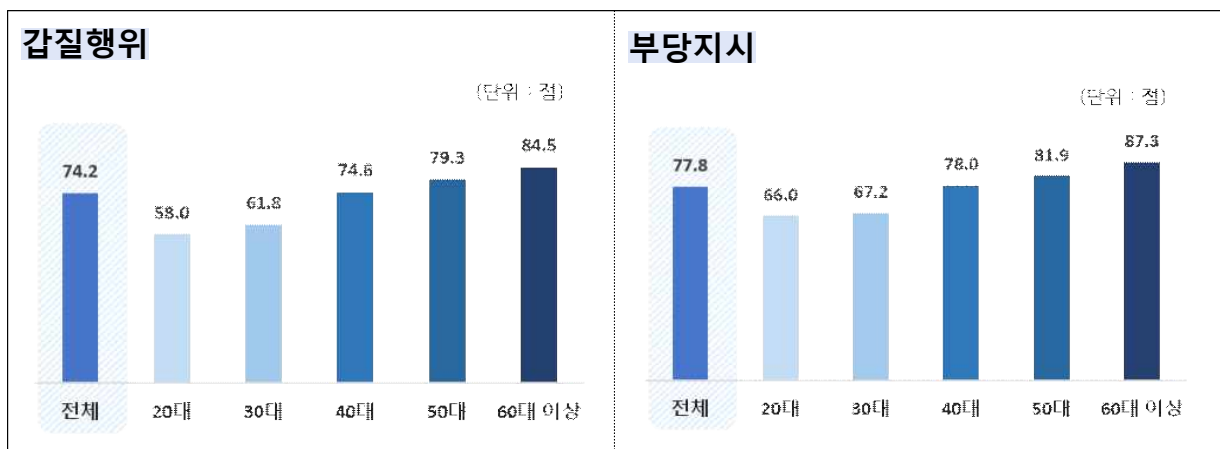
- ‘계약’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갑질행위’에 대해 연령별로 분석하면, 연령별 인식은 유사하게 나타남

< 연령별 ‘갑질 행위’ 인식 점수 (계약) >



- 내부구성원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 영역의 ‘갑질행위’, ‘부당 지시’에 대해 연령별로 분석하면,
 - ‘갑질 행위’, ‘부당 지시’ 항목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인식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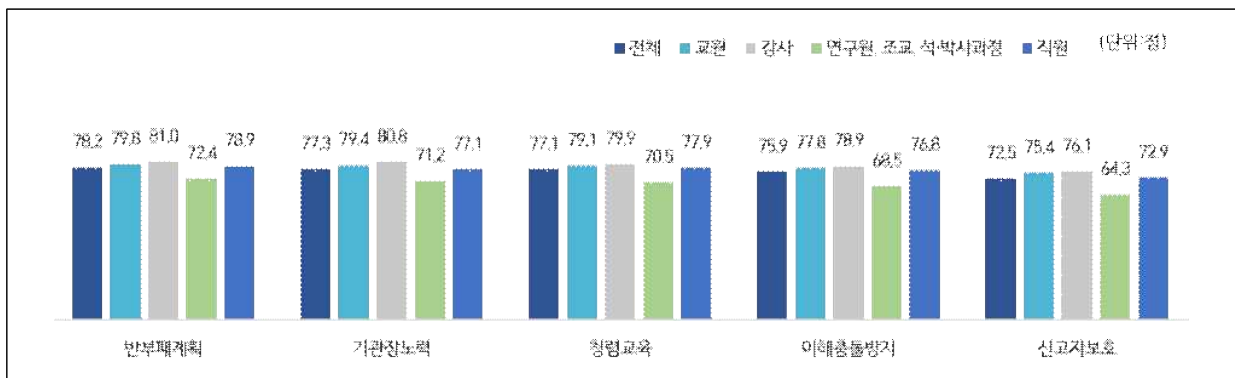
< 연령별 ‘갑질행위’, ‘부당지시’ 인식 점수 (연구 및 행정) >



2. 시책효과성 평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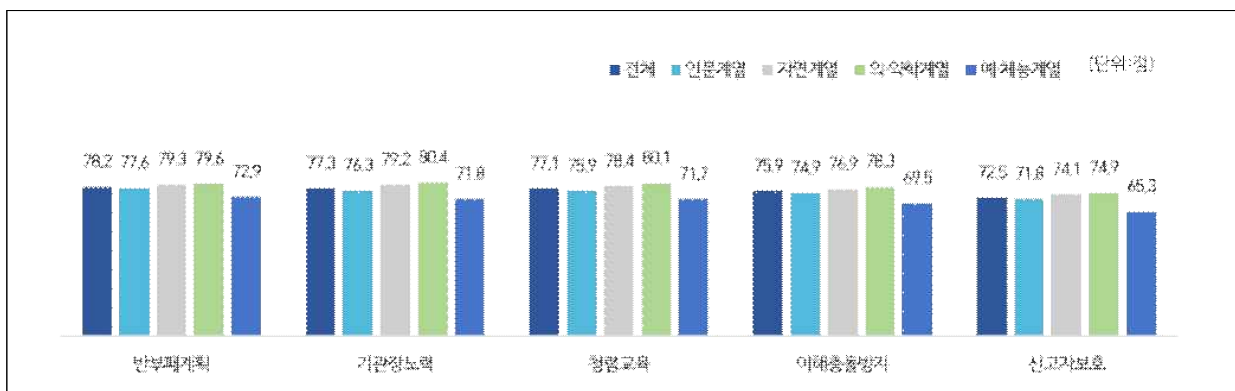
- 시책효과성 평가 항목별로는 ‘반부패계획(78.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고자 보호(72.5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시책효과성의 세부 항목을 직군별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강사’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모든 항목에서 ‘연구원, 조교, 석·박사과정’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직군별 ‘시책효과성’ 인식 점수 >



- 학과별로 시책효과성의 세부 항목을 점수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의·약학계열’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예·체능계열’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학과별 ‘시책효과성’ 인식 점수 >



VII 향후계획

□ 평가결과 활용

- 대상기관 평가결과 공개(~2월) 및 결과 제출(~3월)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결과발표 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
- 우수기관 담당자 정책연수(5월 예정)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시 취약분야 분석·활용(~5월)

□ 향후 평가 추진

- 2023년도 평가 기본계획 수립·발표(2월~3월)
- 대상기관 워크숍 개최 및 평가 관련 의견수렴(3월)
- 실시계획 수립·발표(5월)
- 측정대상자 명부, 징계자료 등 제출(7월)
- 청렴체감도 설문조사(~11월), 청렴노력도 실적 제출(11월) 및 평가(~12월), 부패실태 평가(~12월)
- 결과 발표('24. 1월 예정)

국공립대학 청렴도 등급표(33개 기관)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구분	종합청렴도(33)	청렴체감도(33)	청렴노력도(33)		
1 등급	부경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경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창원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통대학교 한밭대학교		
2 등급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밭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경대학교		부패실태 평가 (감점)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 한밭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3 등급	강릉원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체육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4 등급					
5 등급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